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업종도 포함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12.9.(목) 10:20 / 소통관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환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손실보상제도의 대상을
인원제한 업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는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5분*이
발의해 참여해주셨습니다.

*김경만, 김성환, 김승원, 김진표, 김주영, 민병덕, 박완주, 박찬대, 박홍근, 소병철,
송재호, 신정훈, 신현영, 양이원영, 윤건영, 윤준병,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동작),
이용우, 이원택, 이학영, 임호선, 정일영, 홍정민 (성명 가나다순)

먼저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김경만 의원님 (산자중기위 / 비례)
- 민병덕 의원님 (정무위 / 안양동안갑)
- 신정훈 의원님 (산자중기위 / 전남나주시화순군)
- 양이원영 의원님 (산자중기위 / 비례)
- 이동주 의원님 (산자중기위 / 비례)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민병덕 의원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오늘로 시행 3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3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을 시작한 지 4주 만에
신속보상대상 중 52만 7천개사를 대상으로
약 1.5조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계속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실보상제도 시행을 지켜보며
속이 상하고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했던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할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김경만 의원님>

지난 7월 공포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바로 헌법 제23조에 따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키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보상제도는
정부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국민 재산권을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DJ정부 시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을 통해
복지에 대한 인식을 국민의 기본권 차원으로
전환케 한 사례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법 시행과정에서
이러한 헌법정신과 입법취지는 축소·반영되었습니다.
바로 시행령 제정시 손실보상의 대상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종로만 제한하면서
인원제한 업종은 제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정훈 의원님>

정부의 방역조치를 똑같이 성실히 이행했지만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법 시행에 있어 심각한 불형평성을 의미합니다.

시행령 제정 이후 지금까지 민주당은
인원제한 업종 대상 포함 등을 비롯한
제도 개선과 보완대책 마련을
중기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기부 등 정부는 현행 법과 시행령에 따라
인원제한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님>

더군다나 손실보상법 시행에 맞춰
방역당국이 방역조치 시행의 근거조항을
7월7일자로 변경하여 적용하여
결국 손실보상 대상이 축소되었다는 사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함께 발의합니다.

오늘 발의할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를 규정한
감염병관리법 적용조항을 확대하고
방역조치 중 인원제한 조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동주 의원님>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등에 따른
지속적인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으로
이번 주부터 사적모임 인원 축소를 중심으로
다시금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 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은
현재의 손실보상제도로는 보상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인원제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의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성환 의원님>

우리 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도
몇 일 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당과 상의하여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손실보상제도의 보완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손실보상금 산정에 제외된 항목인
관리비와 아르바이트비 등의 반영을 포함하여
손실보상금의 현실화를 당정협의 등을 통해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
공동발의 의원 일동